

# 제브라 대신 모나미... 日제품 불매에 '애국 테마株' 급등

## 日수출규제 증시 영향은

모나미 상한가 후 52주 신고가 경신  
하이트진로 주가 12%↑ 1만1천원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지난 4일부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모나미 등 '애국 테마주'들의 주가가 상한가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연일 치솟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국내외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규제 기간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국내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등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불매운동 이슈가 뚜렷이 관련 회사의 실적 개선으로까지 연결될지 불확실한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애국 테마주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모나미로, 국내에서 큰 호응을 모았던 제브라·사쿠라·하이트크 등 일본 문구류 대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



청정라거-테라 /하이트진로



모나미가 지난 3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선보인 'FX 153'.

하고 있다. 8일 모나미는 전 거래일 대비 28.23% (995원) 오른 45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에 일본 불매 대신 국산 모나미를 사용하자는 글들을 올라오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모나미는 1960년 설립된 광신화학공업사에서 출발했으며, 국내 최초로 유성볼펜을 출시한 회사여서 모나미 볼펜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특히 모나미는 지난 3월 3·1절 100주년을 기념한 'FX 153'의 한정판을 선보이는 등 애국 마케팅에 적극 나서왔기 때문에 이번 불매운동에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8일 모나미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식 온라인몰의 사용자가 전주 대비 22% 증가했으며, 회원 가입도 전일 대비 3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일 실제 공식 온라인몰의 문구류 매출도 전일 대비 80% 증가로 이어졌다.

모나미 관계자는 "최근 SNS에 필기감이 좋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일본의 '제트스트림'과 우리 회사의 'FX 제타'가 필기감이 비슷해 이 제품을 대체로 사용하자는 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에서 '4캔에 1만원'의 가격 전략 등으로 인기를 모은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일본 맥주가 이

번 불매운동의 타격을 받으면서 국산 맥주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4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마트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27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일본산 제품을 판매중지한다"며 "일본맥주 아사히, 기린 등을 반쯤하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산 맥주는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영향으로 8일 하이트진로홀딩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2% (1180원) 오른 1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또한 국내 의류업계에서 '히트텍' 등으로 돌풍을 일으킨 유니클로 대신 국내 SPA(제조·유통일괄) 패션브랜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류업체 탐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의 주가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신성통상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75% (240원) 오른 15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외에 바이오제네틱스, PN풍년, 삼익약기, 손오공 등도 애국 테마주로 꼽히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보복 조치인 만큼 일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국산기업들이 매출 증대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애국 테마주 관련기업들의 실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묻지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도 단기에 그칠 수 있어 애국 테마주도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일본 자국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일본의 경제적인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영진 연구원은 이어 "모나미 등 애국 테마주들이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기간이 단기에 그칠 수 있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대북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애국 테마주도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어 관련 회사의 실적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전력수급대책 첫 날... 발전설비 모니터링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8일 서울 마포구 중부발전 서울북화력발전소에서 관계자가 발전설비를 원격모니터링 하고 있다.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8일 서울 마포구 중부발전 서울북화력발전소에서 관계자가 발전설비를 원격모니터링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업자 구직급여 7587억→6816억 감소

고용부, 6월 노동시장 동향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가 지난 달에도 7000억원 가까이 지급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816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8%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 5월에는 사상 최고액(7587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 달 다시 7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8만60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8%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난 3~5월 3개월 연속 50만명을 넘었으나 지난 달 40만명대로 떨어졌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달 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지난 3월(8.3%), 4월(7.6%), 5월(7.8%)보다 눈에 띄게 축소됐다.

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00명, 100명 감소하면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68만 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3만명(4.0%) 증가했다. 6월 기준으로 2000년 6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357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000명(0.1%) 늘었다.

/석대성 기자

## “韓·日 무역분쟁, 부품소재 독립선언 기회”

###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

“日 수출규제 확대 100대 품목 가정  
‘피해 최소화’ 다양한 검토작업 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을 놓고 “부품소재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취임한지 꼭 3개월을 맞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독립선언의 주인공은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고, 뿌리 산업을 지키고 있는 소공인이고,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 2대 수장으로 지난 4월 8일 취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중기부가 “클라우드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의 국가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100대 수출 품목 등을 놓고 다양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기부가 산업부 등과 공조하고 있지만 이런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조하고 좀 더 튼튼하게 연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부품소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커 기존 산업부에 배정된 관련 R&D 예산도 중기부 몫으로 일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박 장관은 한·일 무역분쟁에 관한 중소기업 R&D 예산이 모두 산업부 예산으로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산업부에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면서 “부품소재 부문 R&D(예산)를 중기부로 (일부) 돌려주는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과 이날 1시간 20여 분간 이어진 오찬 대화의 대부분은 AI와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박 장관은 “1·2차 산업혁명으로 지난 백년을 살아왔다면 3·4차 산업혁명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혁신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에 힘써왔다면 이제 AI 미래공장을 위해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의 주무부처가 중기부인 상황에서 클라우드와 AI를 접목하지 않고 스마트공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박 장관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AI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놓고 ‘데이터 주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이 구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AI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AI는 데이터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디 한 곳에 집중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등을 갖고 있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데이터 주권론’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현재 중기부 내에 AI 관련 조직을 별도로 꾸리고, 관련 팀장도 내정했다고 부연했다.

/김승호 기자 bada@